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

(황금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1
----------	------

발의연월일: 2024년 월 일

발 의 자: 황금석, 구재평, 박종각, 정용한,
서희경, 김보미, 김종환, 안극수,
김보석, 김장권, 민영미, 추선미,
이영경, 김윤환, 정연화, 이준배,
조정식 (이상 17명)

☐ 제 안 이 유

- 최근 전자담배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존 담배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가운데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규제를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이는 법의 취지와 안정적인 유통, 청소년 보호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함.
-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 붙 임 :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 1부.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4.5%)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와는 다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접한다.

기존의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영업소 간 거리 100m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구내소매인의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구내소매인 간에도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설하였고, 현행 담배사업법은 불을 붙일 필요가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보니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안정적인 유통, 청소년 보호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2024. . .

성 남 시 의 회